



캄보디아

광범위한 경제개혁 적극 추진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기술과 원조를 제공받으며 금융, 재정, 국방, 공공부문 등의 분야에서 개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는 IMF와의 협의하에 자본이 잠식된 일부 은행들의 퇴출, 금융기관 부실화를 막기 위한 관리 감독의 강화, 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의 자본 재확충 및 금융기관 민영화 등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결과 2000년 12월에는 최소 자본 요구액(1,100만 달러)을 충족시키지 못한 11개의 상업은행들이 퇴출되었다.

2001년 11월 캄보디아를 방문한 IMF 평가단은 캄보디아의 금융 구조조정 노력과 아울러 금융감독청(National Audit Authority)의 설립, 병력 감축 등 가시적인 경제개혁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지난 3월에도 IMF는 금융 및 공공부문 개혁추진 실적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채무 구조조정 및 재정·삼림정책 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미진함을 지적하였으며, 세수 확충, 공공지출 합리화, 군대 해산 등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IMF, 금융 부문의 개혁 추진에 긍정적 평가

캄보디아의 금융산업은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금융중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상위 5개 은행이 총예금의 3/4, 총여신의 2/3을 차지하는 등 은행산업의 편중현상도 심하며¹⁾, 높은 정보비용, 금융계약 이행과 관련된 법적 인프라 미비, 금융 감독 및 규제 기능의 미약 등이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예대비율이 68%에 불과하여, 은행들은 수익기반도 취

1) 예금시장에서는 상위 3개 은행이 국내은행이며, 대출시장에서는 외국계 은행이 국내은행을 앞지르고 있음.

약하고 예금을 유치할 인센티브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은행 자산 및 부채의 95%가 미 달러貨 표시로, 캄보디아의 금융산업은 지나치게 미 달러貨에 의존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 개혁의 핵심인 부실은행의 퇴출 및 사후관리가 당초 IMF와의 양해각서대로 진행되는 등 캄보디아의 금융부문 개혁은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1999년에 제정된 금융기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12개 은행이 퇴출되고, 2001년 12월 현재 18개 상업은행만이 남아있다. 이 가운데 5개 은행은 영업활동에 대한 완전한 허가를 받았으나, 나머지 13개 은행은 허가발급을 위한 요건충족 기간을 부여받았고, 이중 10개 은행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업중인 은행의 대부분이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부실은행 정리 이후 은행산업의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총자산 대비 자본비율도 30%로 비교적 높은 자본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대출 부진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며 무수익여신비율도 2000년 말 현재 2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대출 부진과 과중한 무수익여신은 은행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밖에 중앙은행은 은행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은행감독제도를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며, IMF는 무역은행의 개혁 가속화와 궁극적 민영화를 촉구하였다.

공공부문도 인력감축 추진

공공부문에서는 전체 공무원의 약 6%인 9,000명이 감축되었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허수 인원으로, 이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정부 재원을 비축함은 물론, 부족한 분야의 인력을 충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정부는 우선 3,000명의 신규 공무원을 교육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은행의 병력감축 지원 프로젝트(4,200만 달러 규모) 승인 이후, 지난해 10~11월 중 전체의 11.5%인 15,000명의 병력이 해산되었으며, 2002년 말까지 15,000명이 추가로 해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1년 GDP의 3%에 달했던 국방비 규모가 금년에는 2.7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재정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IMF, 채무구조 개선 및 재정정책의 문제점 지적

그러나 IMF는 캄보디아의 부진한 채무리스크줄링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지원 여부는 리스케줄링 실적에 달려있음을 강조하였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총 외채 규모는 1993년 말 18억 달러에서 2000년 말 24억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對러시아 채무이며, 나머지는 對미국 채무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캄보디아의 외채규모가 과다한 것은 아니나, 세수기반이 부족한 정부의 재정에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정부재정에 비해 과도한 채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 수년간 채무 리스케줄링 노력이 진행되었으나, IMF는 그

속도가 매우 부진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러시아 및 미국과의 채무 리스케줄링 협상이 금년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채무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채권국들은 개혁 추진으로 늘어난 재정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양허성 차관을 추가 제공하기로 결정하여, 외채부담은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세율인상 없는 세수기반 확대'를 권고하고 있는 IMF는 캄보디아의 예산 수립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각 부처간의 공조가 원활치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막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7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집권 여당의 일관된 재정정책 수립이 의문시되고 있다.

삼림정책 분야 개혁 부진

삼림자원이 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캄보디아의 특성상, 삼림정책도 IMF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부문의 하나이다.

정치적 이해의 충돌로 일관된 벌목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유기적인 공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삼림·야생동물국과 환경부의 관계는 효과적인 삼림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

삼림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해 신규 벌목인가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벌목에 관한 계약을 전면 갱신하기 위해 기존에 인가된 17개 벌목활동도 2002년 1월 1일 이후 전면 금지하였다. 동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삼림정책이 수리과 환경여하파가 조르 이후에 버모 활동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새로운 인가계약은 금년 9월 이후에나 허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밖에 독립기관인 삼림범죄감시단이 설립되어 활동에 들어갔으며, 불법 벌목의 감시를 위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도 금년 9월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건설한 삼림자원 관리를 위한 삼림법도 가까운 시일내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鄭顯唱】